

국감 '검증 공방' 갈수록 가열

“李 양도세 탈루” “국세청李 뒷조사”

법사위 “잔머리...야 이××” 욕설 파행 정무위 증인채택 강행 처리 놓고 설전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대선을 앞둔 정경으로 인해 민생이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22일 열린 국정감사도 각 정당 대선 후보 검증에 둘러싸고 전방위 충돌이 이어졌다.

특히,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는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욕설 시비 끝에 정회 선언되는 파행을 빚었다.

이날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범여권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초반부터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다 급기야 거친 욕설까지 오가는 파행 끝에 30분도 안 돼 정회 되는 소동을 빚었다.

매각할 당시 양도소득세 등 3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문석호 의원은 “이 후보와 그의 친인척들이 전국에 사농은 부동산은 최소 2천300여원에 달하고 면적은 85만9천평”이라며 “국세청은 편법증여 의혹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의 이 후보 ‘불법조사’ 의혹과 관련, “국

세청과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이 동시에 이 후보 사찰에 동원됐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외부의 압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엄호성 의원은 “국세청은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느냐”며 “정동영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은 물론 정운재·김상진 사건 등 권력형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도 증인채택안의 강행 처리 사태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에게 대한 증인채택안 단독 처리에 대해 박병석 위원장이 사퇴할 것을 촉구한

반면 민주신당 측 의원들은 정당한 증인채택이라며 반박, 질의가 지연됐다.

특히,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문국현 대선 예비후보가 사장 재직시절 유한킴벌리가 불공정거래행위로 2차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고, 친환경주의자라면서 발암물질 기저귀를 판매하는 부도덕성을 보여줬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이 밖에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건교위의 국감에서 대통합 민주신당 홍재형 의원은 “경부운하 건설 비용에 준하는 40조4천억원의 투자로 88조2천129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철도 건설이 경부운하의 객관적 편익보다 훨씬 더 크다”면서 이 후보를 우회 비판했다.



22일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가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은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 선병렬 의원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사대질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국감 <10월23일>

- ▲재정경제위=광주지방국세청 (오전 10시·중부청)
- ▲환경노동위=광주지방노동청 (오전 10시·국회)

청와대는 22일 한나라당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집권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할 데 대해 “지난 10년은 환란 극복과 제도약의 10년이었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뒤 “10년전 IMF(국제통화기금) 환란의 시기를 기억할 것이다. 길게는 50년, 짧게는 한나라당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민정당과 민자당, 신한국당이 빚어낸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국민의 정부와

“지난 10년은 환란극복·제도약의 10년”

청와대, 한나라 ‘잃어버린 10년’ 규정 반박

참여정부는 이때 빚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10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간 정경유착형 낡은 시스템을 2만불 시대를 여는 혁신조정형 경제시스템으로, 가족의존형 최소복지

제도를 보편적인 복지단계로, 남북 냉전, 대결구도를 평화와 경제공동체 단계로 발전시켜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수출증가율과 외환보유고, 회사부도율 등 각종 경제지표를 환란 당시와 비교하면서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나

라와 사회·경제시스템을 바꾸는 데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천 대변인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선전에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전날 “지난 10년은 경제대란, 집값대란, 실업대란, 교육대란, 안보대란, 헌법대란 등 ‘육란(六亂)시대’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손학규·이해찬·김근태 공동선대위원장 신당 ‘통합형 선대위’ 28일 발족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가 경선과정에서 경쟁했던 손학규, 이해찬 두 후보와 김근태 의원 및 오충일 대표가 공동 사령탑을 맡는 ‘3+1’의 ‘통합형 선대위’ 체제로 가동될 전망이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와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반포 필레스호텔의 한 식당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정 후보측 핵심 의원은 22일 “손, 이 두 후보와 김근태 의원 3인 모두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으며, 오충일 대표의 경우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정 후보측은 손, 이 후보의 합류에 따라 경선 과정에서 반대진영에서 있던 당내 인사들을 아우르는 한편 재야와 ‘수장’격이 자 범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백의종군’ 의사를 밝힌 뒤 대통합 작업에 나서왔던 김 의원의 전면 지원으로 ‘개혁’ 노선 보강 등 의견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후보는 이날 저녁 당산동 당사에서 이들 4인과 첫 회동을 갖고 선대위원장단 인선을 공식화하는 한편 선대위 구성·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정 후보측은 이들 외에도 당 안팎의 다양한 인사들을 대거 기용, 오는 28일 개 명실상부한 ‘통합형 선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구상이다.

통합형 선대위는 정 후보가 내세우고 있는 양대 어젠다인 ‘차별없는 성장’과 ‘가족 행복 시대’에 맞춰 ‘차별없는 성장위원회’와 ‘가족 행복 위원회’를 양대 축으로 운영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 표심 잡기 차원에서

여성 선대위를 별도로 설치하는 한편 현재 공식인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 모두 여성으로 영입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경선과정에서 ‘엄지클럽’으로 휴대전화 투표 흥행몰이를 했던 강금실 전 법무장관, 예비경선에서 뛰었던 추미애 전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등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은 외부 영입 0순위로 거론되고 있으며 정대철 전 의원을 비롯, 당내 중진,원로그룹도 고문 등의 역할을 맡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DJ와 관계복원 모색

민주당이 김대중(DJ) 전 대통령과의 관계복원에 시동을 걸고 있어 주목된다.

범여권 통합과정에서 민주당은 ‘도로 열린우리당’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통합하는 것은 잠정적 통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독자생존 노선을 고수, 대통합을 강력히 주문했던 김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신당과 민주당이 각각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범여권 후보단일화가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DJ와 끈질기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은 향후 후보단일화 국면에서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 DJ와의 관계복원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선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명제 앞에서는 김 전 대통령과의 견이 다를 게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22일 김 전 대통령과 이인

제 후보의 면담을 계기로 DJ와 적극적인 교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종필 당 대변인은 “정계개편 국면에서 김 전 대통령과 다소 갈등이 있었지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입장이 같다”며 “이인제 후보의 DJ 면담은 갈등국면을 공식마감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 이기훈 대변인도 “범계혁신세력 단일화에 대해 확고한 의지가 있고 대선승리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이 후보의 각오에 대해 김 전 대통령측도 여러 경로를 통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오늘 면담에서 후보단일화에 대한 DJ의 고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천 대표도 동교동계 인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후보단일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을 DJ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